



의안번호	제 2010 - 23호
의 결 연 월 일	2010. 12. 21. (제30차 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 I. 제33차 전체회의 ..... 1
  - 1. 일시 · 장소 ..... 1
  - 2. 참석자 ..... 1
  - 3. 주요 안건 ..... 1
  - 4. 회의 요지 ..... 1
    - 가.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1
    - 나. 제4차 공청회 대상 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5
  
- II. 제34차 전체회의 ..... 10
  - 1. 일시 · 장소 ..... 10
  - 2. 참석자 ..... 11
  - 3. 주요 안건 ..... 11
  - 4. 회의 요지 ..... 11
    - 가. 마약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11
    - 나. 사기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16
    - 다.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17
    - 라.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18
  
- III. 제35차 전체회의 ..... 19
  - 1. 일시 · 장소 ..... 19
  - 2. 참석자 ..... 19
  - 3. 주요 안건 ..... 19
  - 4. 회의 요지 ..... 19
    - 가. 마약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19
    - 나.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검토 ..... 22
    - 다. 범죄군별 양형기준초안 및 집행유예기준안 검토 ..... 23
    - 라.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24

## I. 제33차 전체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0. 11. 24.(수) 14:00 ~ 18:5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9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박영식, 서봉규, 심재철, 이상원, 정준화, 조은경,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제4차 공청회 대상 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4. 회의 요지

가.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1) 유형분류

- 살인범죄의 유형분류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양형기준 수정안과 같이 살인범죄를 5개 유형으로 분류·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다수 의견
  - 3유형 해당범죄와 4유형 해당범죄가 유형구분을 할 정도로 가벌성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의문이라는 소수 의견
  - 각 유형 내에서 계획범과 우발범의 세부 유형구분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
  - 영아살인,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도 대상에 포함시켜

유형을 분류하자는 보충 의견

- 1유형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1유형의 ‘극도의 생계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1유형에 존치하면서 ‘극도로 삶을 비관하며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또는 피부양자)을 살해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3유형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3유형의 ‘금전적 탐욕 목적 살인’과 2유형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살인’의 가벌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
- 4유형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성범죄의 죄질을 중시하는 국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4유형 중 강간살인과 강도살인의 유형을 구분하여 강간살인의 형량범위를 좀 더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법정형이 동일하고,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형량범위가 동일하므로 동일한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5유형의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수인 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을 살해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동기 및 목적에 있어서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경우이므로 5유형을 수인 살해의 경우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 의견
- 5유형의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아무런 동기나 목적이 없는 살인’도 5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특정 계층·집단·인종·민족에 대한 맹목적 적개심에서 비롯된

살인'이 4유형 해당 범죄보다 죄질이 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유형에 포섭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 '특정 계층·집단·인종·민족에 대한 맹목적 적개심에서 비롯된 살인'은 특정 집단 등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이므로 역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는 의견
- '3, 4유형 해당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서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경우'도 5유형의 구체적 사례로 추가하자는 의견
- 3, 4유형에 이미 해당되는 사례임에도 범행횟수에 따라 다시 5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동기 및 목적에 따른 유형분류기준과 맞지 않아 부적절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거나 '특강(누범)'과 같은 특별가중인자로 처리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므로 5유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

## (2) 권고형량범위

- 1유형의 권고형량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1유형의 기본영역 형량범위를 4-7년,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를 6-9년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수정안의 1유형은 현행 살인죄 양형기준 1유형과 거의 비슷하므로 형량범위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 2유형의 권고형량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통계분석결과에 따르면, '원한관계로 인한 살인'에서도 무기징역형 선고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2유형 가중영역에 무기징역형의 선택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그 경우 2유형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폭이 지나치게 넓어져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의견
- 4유형의 권고형량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현행 강간살인, 강도살인 형량기준의 기본영역에는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4유형의 기본영역에 무기징역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과거보다 형량범위가 오히려 낮아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
- 4유형의 기본영역 형량범위인 17년-22년은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으로 제한되었던 개정 전 형법 하에서는 무기징역의 형량구간이었으므로 개정 전 형법 기준으로는 기본영역에 무기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으로 상한을 1/2 가중한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음’이라는 서술식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개정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이 30년인데, ‘25년 초과’를 무기징역형 선택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근거가 없다는 의견
  - 양형기준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 형량이 반드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과 일치할 필요는 없고, 현행 살인죄 2유형에서 형량범위 특별조정으로 무기징역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25년으로 설정하였다는 의견

### (3) 양형인자

-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잔혹한 범행수법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두 개로 나누어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가중인자를 세분화하여 가중인자의 개수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 (4) 추가 검토사항

- ‘수인 살해’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면, 피해자마다 가중/감경인자가 다를 경우 어떠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양형인자를 적용할 것인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
  - ‘수인 살해’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높아져야 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현행 양형기준과 같이 경한 유형(1유형)에 대하여는 형량범위의 1/2로, 중한 유형(2~5유형)에 대하여는 형량범위의 1/3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2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유형에 관계없이 중지미수의 경우 1/2로, 장애미수의 경우 2/3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형량범위의 상한은 그대로 두고, 하한만 1/2 또는 1/3로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미수범의 행위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함에도, 단순히 1/2, 1/3로 일률적으로 감경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미수범을 양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

#### 나. 제4차 공청회 대상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1)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초안

- 허위진단서작성 유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제2유형의 정의에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경우와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양형인자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감경인자에 비하여 가중인자의 개수가 지나치게 많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양형인자표는 개별 양형인자의 가치, 중요성, 필요성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감경인자와 가중인자의 개수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의견
- 공문서범죄의 양형인자표와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예 : 다량의 문서에 대한 매수의 특정 부분 삭제, 관행화된 업무처리방식에 따른 경우의 삭제, 진지한 반성의 삭제 등)
- 특별가중인자 중 ‘위조·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위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와 ‘위·변조문서를 이용한 제3의 탈법 내지 불법적인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조직적으로 행한 경우’는 위·변조조직의 간부에게는 중복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
- ‘위조·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위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는 사문서위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위·변조문서를 이용한 제3의 탈법 내지 불법적인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조직적으로 행한 경우’는 사기단이 사문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중복평가는 아니라는 의견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변조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처리하지 말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2)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초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범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중한 상해를 포함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모두 양형기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중에 상해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그에 맞게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
  - 상해죄의 법정형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높고, 나중에 설정될 상해죄의 양형기준과 형평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상해죄의 양형기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득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
  - ‘치상의 경우’만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수 의견
  - ‘손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수 의견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특수공무방해치사의 경우에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으나, 그 외의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 주무전문위원회가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경우의 형량범위와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할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논의하기로 함

### (3)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초안

- 대유형을 ‘일반사기’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기’의 2가지로 구분하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음
- 피해액을 기준으로 세부 유형을 분류한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1유형(1억원 미만)의 피해금액을 세분하여 세부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 1억원 미만을 단일한 유형으로 구분한 것과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기’ 유형에 피라미드형 조직사기단 및 취약한 피해자 대상 전문사기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형량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일반사기’ 제5유형(300억원 이상)의 형량범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화이트칼라 계층 범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량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 횡령·배임범죄 형량기준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피해금액 이외에도 미필적 고의 여부, 기망 정도, 피해자의 수 등 중요한 양형인자가 많이 있음에도 피해금액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형량을 정하면 불합리한 양형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
- 낮은 유형의 기본구간 최고 형량이 그보다 높은 유형의 기본구간 최저 형량과 동일하거나 높은 유형의 최저 형량이 더 높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사기죄는 뇌물죄와는 달리 행위의 태양이 매우 다양함에도 피해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나의 형량범위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다른 양형인자의 존부 및 정도에 따라 사기죄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한 유형 기본영역의 상한과 중한 유형 기본영역의 하한 사이에 중첩되는 형량구간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
- 피해금액이 엄청나게 클 경우 또는 다른 가중인자의 정도가 극도로 중한 경우에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5유형 가

중영역의 상한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그럴 경우 형량범위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져 양형기준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상한 개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 양형인자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미필적 고의’는 명확하지 않은 법적 개념이고, 실무에서 확정적 고의보다 미필적 고의가 더 많으므로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 현행 살인죄 양형기준에서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고, 살인, 차용금 사기 등과 같이 미필적 고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서는 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일반감경인자로 ‘유형별 최저 피해가액에 가까운 피해금액인 경우’, 일반가중인자로 ‘유형별 최고 피해가액에 가까운 피해금액인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특별감경인자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서 속칭 ‘외상합의’ 또는 ‘일부변제를 빌미로 한 강제합의’를 제외하기 위하여 ‘조건 없는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형사재판에서 ‘외상합의’ 또는 ‘일부변제를 빌미로 한 강제합의’까지 가려내려면 형사재판의 양형심리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피해자 측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사기범죄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양형인자라는 의견

○ 다수범죄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이득액 합산 처리가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
- 일반적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

견

#### (4)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

- '상선 진술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협조로 인하여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위 형량범위의 1/2까지 감경 가능'의 서술식 기준의 적절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현행 양형기준에서 형량기준의 서술식 기준은 살인미수죄에서 형량범위 1/2 또는 1/3로 감경, 성범죄·강도범죄에서 특강(누범)의 경우 1.5배 가중 등과 같이 법률상 명백한 감경 또는 가중 규정이 있는 경우에 국한되는데, 법률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형량범위를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이 있으므로 감경의 법적 근거가 있고, 마약범죄의 특수성 및 마약사건 양형실무의 감경 관행을 고려할 때 감경의 서술식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의 감경 또는 면제 규정과 양형기준초안의 서술식 기준은 요건이 다르다는 의견
- ☞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의 적용범위 및 요건을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II. 제34차 전체회의

### 1. 일시·장소

- 일시 : 2010. 12. 6.(월) 14:00 ~ 19:00
- 장소 : 대법원 404호 회의실

## 2. 참석자(8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서봉규, 심재철, 이상원, 정준화,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4. 회의 요지

### 가.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서봉규 전문위원과 정준화 전문위원이 각각 양형기준초안을 제출하였는데, 두 가지 양형기준초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쟁점		서봉규 전문위원안	정준화 전문위원안
유형분류	투약·흡연사범(투약·단순 소지) 유형	① 단순 소지·소유행위 제외 ② 대마초, 원료식물 등 제외	① 단순 소지·소유행위 포함 ② 대마초, 원료식물 등 포함
	매매·수수 등 유통 사범(매매·알선) 유형	수량(또는 가액)에 의하여 세부유형 분류 ※ 예 : 5유형(가액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또는 헤로인 40~80g, 코카인 200~400g, 아편 800~1,600g, 몰핀 800~1,600g)	수량(가액)에 의한 세부유형 분류하지 않으나, 대량범 유형에서는 가액에 의한 세부유형 분류
	영업범, 상습범	제6유형에 포섭	제4유형으로 별도 설정
	환각물질 매매 행위	해당 유형 불분명	제1유형으로 별도 설정
	제조·밀수사범(수출입·제조) 유형	수량(또는 가액)에 의하여 세부유형 분류하지 않음	수량(가액)에 의한 세부 유형분류 없으나, 고액인 경우 대량범 유형의 2유형으로 포섭
	대량범 유형	없음	마약류 가액에 따라 1유형(500만~5,000만원), 2유형(5,000만원 이상)으로 분류

서술식 기준		적극적 수사협조로 성과 거둔 경우 정도에 따라 1/2까지 감경 가능	규정 없음
형량 범위	투약·흡연 사범 (투약·단순 소 지) 유형	1유형의 상·하한, 2~4유형의 하한 <b>높음</b>	각 유형별 형량범위 비교
	매매·수수등 유 통사범(매매·알 선) 유형	① 4유형(마약, 가.목 항정 500만원 미만 또는 헤로인 40g, 코카인 200g, 아편 800g, 몰핀 800g 미만) 의 형량범위가 <b>높음</b> ② 6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감경/기본영역의 형량범위는 <b>높으</b> <b>나</b> , 가중영역의 상한은 <b>낮음</b>	① 3유형(마약, 가.목 항정)과 비교 ② 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 범)과 비교
	제 조·밀수 사범 (수출입·제조) 유형	① 3유형(마약, 가.목 항정)의 형량 범위가 <b>높음</b> ② 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감경/기본영역의 형량범위는 <b>높으</b> <b>나</b> , 가중영역의 상한은 <b>낮음</b>	① 3유형(마약, 가.목 항정)과 비교 ② 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 범)과 비교
	대량범 유형	① <b>유통사범 유형 3유형</b> (나.목 및 다.목 항정 500만원~1,000만원)의 형량범위는 <b>낮으나</b> , <b>유통사범 유형</b> <b>5유형</b> (마약 및 가.목 항정 500만 원~1,000만원)의 형량범위는 <b>높음</b> ② <b>유통사범 유형 6유형</b> (나.목 및 다.목 항정 5,000만원 이상) 감경/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는 <b>높으나</b> , 가 중영역의 상한은 <b>낮음</b>	① <b>대량범 1유형</b> (마약관리법 59 조 1항, 2항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5,000만원)과 비교 ② <b>대량범 2유형</b> (마약관리법 59 조 1, 2항의 죄로서 마약류 가 액 5,000만원 이상, 마약관리법 58조 1항 1~4, 6, 7호의 죄로 서 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 상)과 비교
양형 인자	특별가중인자	① 조직적 또는 반복적 범행 ② 조직적 범행의 주모자 ③ 투약 등으로 다른 범행 야기 또 는 의도 ④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 상)	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②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만 한 사유 ③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① 중요한 수사협조 ② 1회성 유통	① 마약범죄 정보 제공 등 수사 에 적극 협조 ②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 한 사유

## (1) 유형분류

○ 매매·알선 등 유통사범에 있어서 마약의 수량(가액)에 의한 세부유  
형 분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수량 또는 가액기준에 따라 세부유형을 분류한다면, 가액기준  
에 따른 유형과 수량기준에 따른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에 어  
느 유형에 포섭되는지 불명확하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피  
고인 간에 형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 가액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마약류의 가액은 거래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가 극심하여 객관적 유형분류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도매가격, 중간도매가격, 소매가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출입, 매매, 투약 등 개별 행위태양에 따른 적용 가격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가액에 따른 유형 및 형량범위를 세분화하여 적용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 제조·밀수사범에서는 마약 종류만을 기준으로 세부유형을 분류한데 반하여 매매·수수등 유통사범에서 수량기준을 도입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
- 특가법 제11조 제2항에서 매매·수수등 유통사범에 대하여만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 특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제조·밀수사범의 경우 가액과 관계없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수수등 유통사범에서만 수량(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
- 특가법 제11조 제2항이 사문화된 것이 아니라 실무상 20g을 초과하는 마약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특가법 제11조 2항을 잘 적용하지 않고, 제조·밀수행위의 수량이 많을 수록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인 경우가 많으므로 마약관리법 제58조 제2항을 의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
- 실무상 필로폰 및 대마 사건에 있어서 수량이 10g을 초과하는 경우는 매우 적고, 선고형량의 결정에 있어서 수량은 결정적 인자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특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한도에서는 수출입·매매·투약의 횟수, 관련 행위와의 경합 여부, 최근의 전과 유무 등의 다른 인자가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한, 마약의 수량(가액)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형량범위를 달리 설정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 (2) 형량범위

○ ‘조직적 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협조자에 대하여 형량범위의 1/2 까지 감경 가능’의 서술식 기준의 적용 요건 및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특정범죄에 관하여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는, ① 공범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자들 간의 사실적 관계로 인하여 협조자의 협조가 원인이 되어 드러난 범죄에도 적용되고, ② 이미 드러난 범죄에 더하여 추가 범행이나 범행방법 등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③ 동법 제3조(범죄신고자 등이나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동법 제16조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거나 보복당할 우려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법 제16조는 서술식 기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

- ① 자신의 범죄가 먼저 발견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에 상선 진술 등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 동법 제16조의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동법 제3조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을 것이며, ③ 마약사건의 판결문에서 위 조항을 이유로 형을 감면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고, ④ 위 조항은 살인, 약취·유인, 특수강간, 강도 등의 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유독 마약류범죄에 대하여만 위 조항을 근거로 일률적 형량 감경의 서술식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

○ 위 서술식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의견이 제시됨

- 현재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 중인데, 위 서술식 기준은 사실상 플리바게닝제도를 양형기준에 도입하는 결과가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
- 형량범위 감경의 서술식 기준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16조의 형의 감면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과를 중심으로 규정한 것이고, 플리바게닝은 수사과정에서 형의 감면을 조건으로 피의자와 유죄 인정 협상을 하는 것이어서 본질이 다르다는 의견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한 보호 및 형의 감면인데 반하여, 마약범죄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상선 진술 등을 한 경우 형의 감경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플리바게닝에 해당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 서술식 기준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성격 및 요건이 다르다는 의견
- 마약범죄 및 수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취지를 양형기준에 좀 더 반영해서 특별하게 형량범위 감경의 서술식 기준까지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형량범위 감경의 서술식 기준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에게 회유를 하는 것과 같이 권한 남용을 할 여지를 주어 사건의 실체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약취·유인, 특수강간범죄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므로 마약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경인자로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서술식 기준의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과 같은

- 방법으로 수사협조자에 대하여 충분히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까지 이를 고려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의견
- 제3안의 방안으로서 수사협조에 관한 특별감경인자를 2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적극적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경우, 마약범죄자가 자수를 하면서 적극적 수사협조까지 하면, 2개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되는데, 이와 별도로 적극적 수사협조에 관한 특별감경인자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위 서술식 기준의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적용되는 수사(사법)협조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량범위의 하한 또는 상·하한을 각 1/2 감경’하고,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사(사법)협조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유형보다 더 중하거나 제00유형(중한 유형)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그 외의 수사(사법)협조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 ‘마약범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

## 나.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논의결과, 쟁점 및 쟁점별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정리됨

쟁점		의견		의견	
유형분류		초안의 유형분류대로 유지하자는 다수 의견		1유형을 세분화하자는 소수 의견	
형량범위	일반사기 5유형의 형량범위	4유형과 5유형의 피해금액 차이에 비해 형량범위의 차이가 적고,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엄벌이라는 규범적 고려를 한다면, 5유형의 형량범위를 상·하한 각 1년 정도씩 상향	통계적 선고형량을 포섭하면서도 규범적 조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5유형 기본영역 및 가중영역의 상한만 1년씩 상향하는	통계적 선고형량보다 높게 5유형의 형량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이미 상당 부분 규범적 조정을 하였으므로 초안의 형량범위가 적절하다는 의견	종래 판결의 평균형량에 비하여 5유형의 감경영역 하한이 높게 설정된 것은 부당하므로 오히려 초안의 형량범위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하다는 의견
	조직적이고 전문적 사기	형량범위가 적정하다는 의견		형량범위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의견	
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을 저지른 경우	하나의 특별감경인자로 통합하는 데에 대체적 의견이 모아짐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소극적 또는 부작위의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				
	오로지 회사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횡령·배임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소속의 회사 아닌 제3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1인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에 대하여 오히려 형을 감경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절하므로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대신, 기존 일반감경인자에 포섭시켜 규정하자는 다수 의견		자신의 사리 추구 목적 사기 범행을 한 결과 회사와 같은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이므로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대신,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소수 의견	‘사기 범행을 통하여 자신의 실질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로 수정하여 특별감경인자로 존치하자는 소수 의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조건 없는 처벌불원’과 ‘조건부 처벌불원’으로 나눌 경우, 피해자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제한하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일일이 증인으로 소환하기 어려운 점 등 감안할 때, 초안대로 유지하자는 다수 의견		외상합의 또는 일부변제 빌미로 한 강제합의를 제외하기 위해 ‘조건 없는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로 수정하자는 소수 의견	
다수범죄 처리기준		일반적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		유형에 관계없이 이득액 합산 처리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	

#### 다.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전문위원들에 대한 서면 의견 취합결과, 쟁점 및 쟁점별 의견이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상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대상 포함 여부

쟁점	의견	의견
상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상해를 양형기준 적용대상으로 삼자는 다수 의견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하여 상해죄의 양형기준에서 처리하자는 소수 의견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의 양형인자 반영방법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의견
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집행방해/공용물무효·파괴 유형에서 <b>특별가중인자</b>로 반영</li> <li>■ 특수공무방해치상 유형에서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집행방해/공용물무효·파괴 유형에서 <b>특별감경인자</b>로 반영</li> <li>■ 특수공무방해치상 유형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li> </ul>	
2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집행방해/공용물무효·파괴 유형에서 <b>일반감경인자</b>로 반영</li> <li>■ 특수공무방해치상 유형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li> </ul>	소수 의견
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집행방해/공용물무효·파괴 유형에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b>특별가중인자</b>로,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b>일반가중인자</b>로 반영</li> <li>■ 특수공무방해치상 유형에서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집행방해/공용물무효·파괴 유형에서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을 <b>특별감경인자</b>로,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을 <b>일반감경인자</b>로 반영</li> <li>■ 특수공무방해치상 유형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li> </ul>	다수 의견
3-1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집행방해/공용물무효·파괴 유형에서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을 <b>일반감경인자</b>로만 반영</li> <li>■ 특수공무방해치상 유형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li> </ul>	소수 의견
3-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집행방해/공용물무효·파괴 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유형에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b>특별가중인자</b>로, ‘경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b>일반가중인자</b>로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한 상해 발생한 경우(특별가중된 경우) : ‘처벌불원’을 <b>특별감경인자</b>로 반영하고,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li> <li>■ 경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일반가중된 경우) : ‘처벌불원’을 <b>일반감경인자</b>로 반영</li> </ul>	소수 의견

- 특수공무방해치상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체적 의견이 모아짐 (특수공무방해치상의 경우에도 위 3-2안과 같이 처리하자는 소수 의견 있음)

#### 라.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초안의 유형분류, 형량범위, 양형인자표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

### III. 제35차 전체회의

####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0. 12. 14.(화) 09:30 ~ 12:4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2. 참석자(8명)

- 수석전문위원, 강우예, 서봉규, 심재철, 이상원, 정준화, 홍준호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초안 검토
-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검토
-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초안 및 집행유예기준안 검토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초안 및 집행유예기준안 검토
-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방안 검토

#### 4. 회의 요지

##### 가. 마약범죄 양형기준초안 검토

##### (1) 유형분류

- 매매·알선 등 유형에 있어서 마약의 수량 또는 가액에 의한 세부 유형 분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특가법 제11조 제2항이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

으므로 가액을 기준으로 세부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가액을 기준으로 세부 유형을 분류하되, 수량은 참고기준으로 부가하는 방안도 무방하다는 의견
  - 가액보다는 수량이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특가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수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가액기준과 수량기준을 혼용할 경우, 가액기준에 따른 유형과 수량기준에 따른 유형이 달라지는 경우에 어느 유형에 포섭되는지 불명확하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간에 형량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양형기준 적용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가액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 마약의 수량을 기준으로 형량범위를 정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마약의 종류와 행위태양만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세부 유형의 개수를 줄일 경우, 서봉규 전문위원안과 정준화 전문위원안이 상당히 접근하므로 양자를 통합하여 하나의 양형기준안을 작성하고, 형량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 전문위원 전체회의 후 서봉규 전문위원과 정준화 전문위원이 미합의 쟁점을 제외하고 마약범죄 양형기준 통합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회의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 (2) 형량범위

- ‘조직적 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협조자에 대하여 형량범위의 1/2까지 감경 가능’의 서술식 기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상선 진술을 통하여 수사에 성과를 거둔 경우에 하한만 1/2까지 감경’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적용되는 수사협조자에 대하여 형량범위의 하한만 1/2로 감경’으로 서술식 기준을 수정하고,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인자로, ‘일반 수사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등 수사협조를 3단계로 질적 구분을 하고,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수사협조자 1/2 감경의 서술식 기준’은 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요건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므로 현행법상 직접적 근거가 없고, 요건의 해당 여부가 법 규정이 아니라 주로 수사기관의 의사와 판단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며, ② 법정형이 하한만 규정된 마약범죄의 경우, 감경영역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1/2로 감경할 경우 법정형을 무시한 형량범위를 권고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가 법정형의 1/2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없다는 의견
- 마약범죄 및 수사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특별감경인자 정도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술식 기준으로 1/2 감경 기준을 두는 것은 별도의 형량기준표를 만드는 결과가 되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 목적론적, 법정책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량범위 1/2 감경의 서술식 기준의 법적 근거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양형기준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수사협조로 성과를 거둔 경우’는 협조한 피고인보다 수사기관이 얼마나 유효하게 범인을 체포했는가에 좌우되므로, 만약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체포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위 서술식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

- 수사협조의 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은 마약범죄 이외에 살인, 약취·유인, 특수강간죄 등에도 적용되는데, 마약범죄에 한해서만 1/2 감경의 서술식 기준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 적극적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되, 중요성을 감안하여 두 개의 특별감경인자로 양형인자표에 반영하자는 의견

#### 나.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집행유예기준 개선방안의 검토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하기로 하는 데에 대체적 의견이 모아짐

-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시간적 제약으로 제2기 양형위원회 임기 중에 집행유예기준의 수정안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이번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 중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를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적어도 1개 이상 많은 경우’로 수정하는 것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 제3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면 곧바로 전문위원들이 연구한 집행유예기준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 다. 범죄군별 양형기준초안 및 집행유예기준안의 검토

### (1) 사기범죄

-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기’ 유형의 명칭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조직적 사기’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컴퓨터 등 사용사기를 양형기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4, 5유형의 형량범위는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3유형의 형량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양형인자표와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일반감경인자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삭제하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집행유예기준안과 관련하여 주요긍정사유에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의 실질적 손해액을 5,000만원 미만으로 정하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으나, 다른 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주요긍정사유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 횡령·배임범죄 집행유예기준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

### (2) 공무집행방해범죄

-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부 양형기준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이상,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상응한 중한형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일반공무집행방해 유형 가중영역의 형량

범위를 1년~4년으로 수정하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

○ ‘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당해 사건에서 경합범인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과거 동종 전과의 존재로 인하여 반복적 범행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특별가중인자의 ‘동종 누범’ 또는 일반가중인자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실행전과’의 양형인자로 반영이 가능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
- 과거에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무고죄의 양형인자표와 같이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으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상한만 가중되고 하한이 가중되지 않으므로, 경합범의 경우에도 ‘반복적 범행’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의견

○ 집행유예기준안과 관련하여, 주요부정사유로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을 규정하고, ‘처벌불원’은 양형인자표에서의 반영방식과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하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으나, 그 외의 참작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을 삭제하자는 의견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삭제하자는 의견
- 현행 범죄군별 집행유예기준에서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라. 개정 형법 시행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의 검토

- 기타 중대범죄의 형량범위 수정 및 설정방안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성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미만 상해/치상 중 강간 유형(제2-4유형),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가중영역의 상한을 개방하고, 강도범죄 중 강도치사의 형량범위를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하며 가중영역의 상한을 개방하고, 설정 작업 중인 약취·유인범죄 중 약취·유인치사/인질치사의 형량범위를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형량범위와 동일하게 하며 가중영역의 상한을 개방하며, 살인범죄와는 달리 개별 범죄군에서 그대로 규정하는 데에 의견이 일치함
- 살인범죄 유형 정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해한 경우'가 2유형 해당 범죄와 구분이 모호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현을 수정하기로 하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짐